# 단속에서 권리보호로:
# 2025년 중국 저작권 집행 10대 사건이 말하는 것

**손한기** |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 융합학과 교수

## Ⅰ. 들어가며: 전환기의 중국 저작권 집행

중국의 저작권 집행은 오랫동안 '강한 법률, 약한 집행(Strong Law, Weak Enforcement)'이라는 역설적 평가를 받아왔다. 1990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2001년 제1차, 2010년 제2차 개정을 거쳤으며, 2020년 11월 개정되어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제3차 개정에서는 법정손해배상액 상한을 500만 위안(한화 약 11억 원, 구법 50만 위안 대비 10배 인상)[1]으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제54조 제1항, 침해액의 1~5배)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그러나 실제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을 줄곧 지식재산 보호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올려두었고, 한국 콘텐츠 업계 역시 중국 내 K-콘텐츠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 왔다.

그러나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이 전국불법출판물단속판공실(全国"扫黄打非"办公室, 이하 '사오황다페이 판공실')[2]과 공동으로 2026년 5월 22일 발표한 「2025년도 전국 침해·해적판 단속 10대 사건(2025年度全国打击侵权盗版十大案件)」(이하 '2025년 10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면, 이러한 통념을 재고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보인다.

첫째, 처벌의 무게가 달라졌다. 10대 사건 중 7건이 형사처벌로 귀결되었으며, 최

1. 한화 환산액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 금액으로, 원고 작성 시점 기준 1위안=약 220원을 적용하였다.
2. '사오황다페이(扫黄打非)'는 '음란물 단속(扫黄)'과 '불법 출판물 단속(打非)'의 합성어로, 음란·퇴폐 출판물 및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설치된 중국의 범정부 단속 기구이다. 중앙선전부, 공안부, 문화관광부, 국가판권국 등 복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협력 체계로 운영되며, 전국 각지에 지방 하부 조직을 두고 있다.

고 징역 7년에 수천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예외적 수단에 가까웠으나, 이제 그것은 중대 침해에 대한 표준적 대응이 되고 있다.

둘째, 집행 대상이 확장되었다. 전통적인 해적판 제조·유통업자를 넘어, 플랫폼 운영자의 공동침해 책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불법 유통,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프로그램 제공자에 이르기까지 집행의 그물이 한층 촘촘해졌다.

셋째, 집행의 방법론이 정교해졌다. 블록체인 기반 증거 고정, 표본추출 방식의 동일성 감정, 검찰의 수사 개입을 통한 공급망 전체 타격, 다지역 공안 협력 수사 등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집행 기법들이 이제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은 2025년 10대 사건을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핵심 쟁점을 검토한 뒤, 이 사건들이 드러내는 중국 저작권 집행의 구조적 변화를 다섯 가지 키워드로 분석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콘텐츠·소프트웨어 기업과 권리자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2025년 10대 사건: 분야별 분석

2025년 10대 사건은 침해 유형과 집행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시청각·음악저작물, ② 소프트웨어, ③ 출판물·교재, ④ 미술·문화창의(文创) 저작물 분야가 그것이다. 아래 [표1]은 10개 사건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각 사건을 표의 번호(①~⑩)와 연결하여 분석한다.

**[표1] 2025년 전국 침해·해적판 단속 10대 사건 개요**

| 번호 | 사건명 | 침해 유형 | 사건 금액 | 처벌 결과 |
|---|---|---|---|---|
| 1 | 베이징 모 상무회사 문화창의 저작물 침해 | 문화창의(文创) 저작물 | 1.1만 위안 (한화 약 242만 원) | 행정: 벌금 19.4만 위안 (한화 약 4,268만 원), 허위 등록 취소 |
| 2 | 상하이 모 과학기술회사 시청각저작물 침해 | 시청각 저작물 (클라우드 공유) | 미공개 | 행정: 벌금 20만 위안 (한화 약 4,400만 원) |

| 번호 | 사건명 | 침해 유형 | 사건 금액 | 처벌 결과 |
|---|---|---|---|---|
| 3 | 상하이 징안 화 모씨 등 미술저작물 침해 | 해적판 만화 앱 | 2,400만 위안 (한화 약 52억 8,000만 원) | 형사: 최고 징역 4년 9개월, 개인 벌금 3만~300만 위안 (한화 약 660만~6억 6,000만 원), 법인 벌금 합계 700만 위안 (한화 약 15억 4,000만 원) |
| 4 | 장쑤성 전장 '12 · 05' 교재 침해 | 해적판 교재 | 3,500만 위안 (한화 약 77억 원) | 형사: 최고 징역 4년 10개월, 벌금 최고 1,730만 위안 (한화 약 38억 600만 원) |
| 5 | 장쑤성 양저우 샤오 모씨 등 소프트웨어 침해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 6,000만 위안 (한화 약 132억 원) | 형사: 최고 징역 5년 6개월, 각 벌금 500만 위안 (한화 약 11억 원) |
| 6 | 저장성 진화 런 모씨 등 극장 개봉 영화 침해 | 해적판 영상 사이트 | 1,700만 위안 (한화 약 37억 4,000만 원) | 형사: 최고 징역 7년, 벌금 1,730만 위안 (한화 약 38억 600만 원 ) |
| 7 | 장시성 난창 '6 · 09' 소프트웨어 침해 | 소프트웨어 크랙 키 | 3,400만 위안 (한화 약 74억 8,000만 원) | 형사: 최고 징역 7년, 벌금 5만~400만 위안 (한화 약 1,100만 ~8억 8,000만 원) |
| 8 | 허난성 상추 모 상무회사 교재 침해 | 해적판 교재 (라이브 커머스) | 소규모 | 행정: 벌금 23만 위안 (한화 약 5,060만 원) |
| 9 | 후난성 창사 '12 · 06' 도서 침해 | 해적판 학습참고서 | 미공개 | 형사: 최고 징역 5년 3개월, 벌금 282만 위안 (한화 약 6억 2,040만 원) |
| 10 | 광둥성 둥관 '6 · 21' 음악저작물 침해 | 해적판 음악 USB | 1,100만 위안 (한화 약 24억 2,000만 원) | 형사: 최고 징역 3년 3개월, 벌금 3만~60만 위안 (한화 약 660만~1억 3,200만 원) |

## 1. 시청각 · 음악저작물 분야: 플랫폼 책임론의 전면화 [표1 ②]

### (1) 상하이(上海) 모 과학기술회사 시청각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2025년 8월 업무 중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상하이시 문화관광국 집행총대(上海市文化和旅游局执法总队)가 입건 ·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25년 2월 이후 해당 웹사이트의 다수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가판권국의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명단(版权保护预警名单)[3]에 등재된 '당인가탐정1900(唐探1900)', '만물을 낳다(生万物)' 등 총 319편(집)에 달하는 시청각저작물의 클라우드

3.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명단(版权保护预警名单)은 국가판권국이 운영하는 공식 제도로, 신규 개봉 영화 · 드라

스토리지(网盘) 공유 링크를 플랫폼에 올려 공중에 제공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조기경보 명단 내 저작물의 해적판 링크를 대량으로 전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파 편의를 계속 제공하였다. 2025년 12월 상하이시 문화관광국 집행총대는 「저작권법」 제53조와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제23조에 근거하여 경고 및 벌금 2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부과하였다.[4]

이 사건의 법적 핵심은 '레드플래그 원칙(红旗原则, red flag doctrine)'의 적용 여부이다.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보호조례」 제23조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실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공동침해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집행기관은 조기경보 명단에 등재된 저작물이 플랫폼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침해 인식 상황, 즉 '레드플래그(red flag)'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행정집행 실무에서 국가 관리 조기경보 명단을 레드플래그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국 플랫폼 책임론의 실질적 강화를 의미한다.

### (2) 저장성(浙江省) 진화(金华) 런(任) 모씨 등 극장 개봉 영화 저작권 침해 사건 [표1 ⑥]

2025년 1월 업무 중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둥양시 공안국(东阳市公安局)이 입건 · 수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18년 이후 런(任)씨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수의 해적판 영상 사이트를 구축하여 '나타지마동요해(哪吒之魔童闹海)' 등 조기경보 명단 내 극장 개봉 영화(院线电影)를 포함한 시청각저작물 16만여 편을 무단 공중송신하고 광고 수익으로 1,700여만 위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둥양시 인민검찰원(东阳市人民检察院)의 공소 제기에 따라, 둥양시 인민법원(东阳市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죄(侵犯著作权罪)로 런씨 등에게 징역 7년에서 6개월까지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730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

마 · 도서 등 침해 위험이 높은 저작물을 사전에 등록하여 집중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명단에 등재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는 플랫폼이 침해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던(应知)' 상황, 즉 레드플래그(red flag)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집행 실무상 취급된다. 본문 Ⅲ장 3절 참조.

4.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보호조례」(2013년 개정) 제23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검색 또는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후 본 조례에 따라 침해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차단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링크된 저작물이 침해임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침해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검찰이 입건 감독(立案监督) 권한을 발동하여 해적판 사이트 제작 템플릿 제공자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공급망 일망타진(全链条打击)을 실현하였다. 둘째, 형사부대민사소송(刑事附带民事诉讼, 「형사소송법」 제101조)을 활용하여 형사처벌과 민사 구제를 결합하는 종합적 권리 보호를 실현하였다.[5]

### (3) 광둥성(广东省) 둥관(东莞) '6 · 21'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표1 ⑩]

2024년 6월 상급 기관 이첩 단서를 바탕으로 둥관시 공안국(东莞市公安局)이 저작권 집행 부서의 협조하에 입건 · 수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23년 5월 이후 모(莫)씨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 USB 드라이브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안기관은 현장에서 해적판 음악 USB 2만여 개를 압수하였고, 위법 거래액은 1,100여만 위안에 달한다. 2025년 9월 둥관시 제3시구 인민검찰원(东莞市第三市区人民检察院)의 공소 제기에 따라, 둥관시 제3인민법원(东莞市第三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죄로 모씨 등에게 징역 3년 3개월에서 2년 3개월까지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만 위안에서 60만 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판결문은 저작권 행정집행 · 공안 · 검찰 · 법원 · 우정관리(邮政管理) 부문 등 5개 기관이 생산–창고–판매–물류 전 단계에 걸쳐 공조 단속을 전개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소결]** 이 세 사건은 중국 저작권 집행의 무게중심이 직접 침해자 단속에서 플랫폼 운영자의 관리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기경보 명단을 통한 레드플래그 판단 근거 활용, 5개 기관 공조 단속, 공급망 전체 타격이라는 세 축이 시청각 · 음악저작물 집행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

5. 중국 「형사소송법」(2018년 개정) 제101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형사소송 진행 중에 부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형사부대민사의 실제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판권국 공식 발표문을 근거로 한다.

## 2. 소프트웨어 분야: 라이선스 키 불법 유통과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 (4) 장쑤성(江苏省) 양저우(扬州) 샤오(肖) 모씨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표1 ⑤]

2023년 7월 권리자 신고 단서를 바탕으로 양저우시 공안국(扬州市公安局)이 입건 · 수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19년 이후 샤오(肖)씨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 플랫폼 계정을 통해 해외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 제품과 라이선스 키(密钥)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위법 거래액 6,000여만 위안을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5년 1월 가오여우시 인민검찰원(高邮市人民检察院)의 공소 제기에 따라, 가오여우시 인민법원(高邮市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죄로 샤오씨 등에게 징역 5년 6개월에서 4년 9개월까지를 선고하고 각 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소프트웨어 해적판 유통의 방식이 CD · DVD 패키지 판매에서 라이선스 키 유통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이다. 집행기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 기록과 소셜 플랫폼 메시지를 디지털 증거로 활용하여 침해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다.

### (5) 장시성(江西省) 난창(南昌) '6 · 09'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표1 ⑦]

2021년 6월 신고 단서를 바탕으로 난창시 공안국 하이테크분국(南昌市公安局高新分局)이 입건 · 수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19년 2월 이후 장(张)씨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으로 여러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크랙 키(破解密钥)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맞춤형 크랙 키를 제작 ·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법 거래액은 3,400여만 위안에 달한다. 2025년 9월 난창시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 인민검찰원(南昌高新技术产业开发区人民检察院)의 공소 제기에 따라, 난창시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 인민법원(南昌高新技术产业开发区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죄로 장씨 등에게 징역 7년에서 6개월까지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5만 위안에서 400만 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의의는 기술적 보호조치(技术保护措施, TPM) 우회 행위에 대한 독자적 형사 책임의 추궁에 있다. 2021년 6월 1일 시행 「저작권법」 제49조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의로 회피 ·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计算机软件保护条例)」 역시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별도로 규제한다.[6] 이 사건에서 법원은 크랙 키 제작 · 배포가 단순 방조를 넘어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라는 독립적 침해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소결]** 두 소프트웨어 사건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집행 경향은 명확하다. 중국은 단순 사용자보다 조직적 유통자와 기술 우회 수단 제공자를 중점 규율하고 있다. 라이선스 키 유통과 크랙 키 제작은 이제 독립적인 형사처벌 대상이며, 집행기관은 디지털 거래 기록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었다.

## 3. 출판물 · 교재 분야: 청소년 보호와 다지역 공조 수사

### (6) 장쑤성(江苏省) 전장(镇江) '12 · 05' 교재 저작권 침해 사건 [표1 ④]

2023년 10월 상급 기관 이첩 단서를 바탕으로 전장시 공안국(镇江市公安局)이 저작권 · 문화시장 종합집행 부서의 협조하에 입건 · 수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22년 6월 이후 왕(王)씨 등이 초중고 국어 · 수학 등 교과서 300여 종, 30여 개 출판사 저작물의 해적판 교재를 인쇄 · 매입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법 거래액은 3,500여만 위안에 달한다. 2025년 10월 전장시 경제개발구 인민검찰원(镇江市经济开发区人民检察院)의 공소 제기에 따라, 전장시 경제개발구 인민법원(镇江市经济开发区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죄와 침해복제품 판매죄(销售侵权复制品罪)를 병합하여 왕씨 등에게 징역 4년 10개월에서 3년까지를 선고하고 65만 위안에서 1,730만 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은 '저작권 보호 협력 연근 센터(版权保护联勤中心)'[7]가 저작권 · 문화시장 집행 부문과 공안 간 신속 협의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입건 초기부터 공동 대응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6. 2021년 6월 1일 시행 「저작권법」 제49조 제1항: "저작권자 또는 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타인에게 회피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동법 제48조는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관련 조항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와 구별된다.

7. 연근(联勤, liánqín)은 군사 · 공안 분야에서 유래한 용어로 '공동 지원 · 공동 대응'을 의미한다. 저작권보호연근센터(版权保护联勤中心)는 저작권 행정집행 부문과 공안기관이 저작권 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 협의 채널과 공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구로, 행정 단서를 형사 수사로 즉시 연계하는 '행형연계(行刑衔接)' 체계의 실질적 운영 주체이다.

### (7) 허난성(河南省) 상추(商丘) 모 상무회사 교재 저작권 침해 사건 [표1 ⑧]

2025년 8월 업무 중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하샹현(夏邑县) 저작권 행정집행 부서가 입건 ·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23년 이후 허난성 상추시 모 상무회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라이브 방송 플랫폼 계정을 통해 해적판 국어 · 음악 등 교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사자는 학교의 남은 교재를 수거하여 정품에 해적판을 섞어 판매하고, 일반 주택을 창고로 활용하며 타 지역 사업자 등록증을 내세우고,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하는 등 다층적인 위장 수법을 구사하였다. 현장에서 해적판 교재 610권이 압수되었으며, 2025년 8월 하샹현 문화광전여행국(夏邑县文化广电和旅游局)은 「저작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경고 · 위법소득 몰수 · 벌금 23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부과하였다.

### (8) 후난성(湖南省) 창사(长沙) '12 · 06' 도서 저작권 침해 사건 [표1 ⑨]

2023년 12월 이첩 단서를 바탕으로 창사시 공안국(长沙市公安局)이 입건 · 수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21년 7월 이후 샤오(省)씨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초중고 학습참고서(教辅图书) 50여 종, 40여만 권을 대량으로 불법 인쇄하고 대리상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범행 조직이 후난(湖南) · 허베이(河北) · 구이저우(贵州) · 광둥(广东) 등 여러 성에 걸쳐 지역적 · 혈연적 유대로 결속된 조직 범죄망을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2025년 12월 창사시 톈신구 인민검찰원(长沙市天心区人民检察院) 및 창사현 인민검찰원(长沙县人民检察院)의 공소 제기에 따라, 창사시 톈신구 인민법원(长沙市天心区人民法院) 및 창사현 인민법원(长沙县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죄와 침해복제품 판매죄로 샤오씨 등에게 징역 5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를 선고하고 282만 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후난 창사 · 러우디(娄底), 허베이 스자좡(石家庄) · 랑팡(廊坊), 구이저우 룽리(龙里), 광둥 샤오관(韶关) 등 6개 지역 공안기관의 광역 공조 수사로 전체 유통망을 일거에 붕괴시킨 점이 특히 주목된다.

**[소결]** 교재 · 도서 분야의 세 사건은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경유한 조직적 유통 구조를 겨냥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 저작물에 대한 해적판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사회적 해악으로 평가되며,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양형을 선택하였다. 연근 센터를 활용한 부처 간 공조와 다

지역 공안 협력이 조직적 침해망 해체의 실질적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 4. 미술 · 문화창의(文创) 저작물 분야: 디지털 증거와 허위 등록 대응

### (9) 베이징(北京) 모 상무회사 문화창의 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표1 ①]

2025년 5월 투서 단서를 바탕으로 베이징시 문화시장 종합집행총대(北京市文化市场综合执法总队)가 입건 ·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24년 12월 이후 베이징 모 상무회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가박물관(国家博物馆) 등 문화기관의 문화창의(文创) 상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법소득은 11,031 위안에 그쳤지만, 베이징시 문화시장 종합집행총대는 2025년 8월 「저작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경고 · 위법소득 몰수 · 침해 복제품 몰수 · 벌금 19.4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한편, 저작권 등록 기관과 협력하여 허위 저작권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집행기관은 '블록체인 증거 고정(区块链固证) · 일치성 대조(一致性比对) · 물리적 계량화(物理性量化) · 권리자 판단(权利方判断)'의 네 단계를 통합한 인정 체계를 적용하여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허위 등록을 무력화하였다. 이 방법론은 향후 문화창의 저작물 집행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 (10) 상하이(上海) 징안(静安) 화(华) 모씨 등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표1 ③]

2023년 5월 이첩 단서를 바탕으로 상하이시 공안국 징안분국(上海市公安局静安分局)이 입건 · 수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21년 7월 이후 화(华)씨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수의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해외 저작권자의 미술저작물을 무단 전송하는 해적판 만화 앱을 구축하고, 회원비 · 광고비 수익으로 2,400여만 위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5년 4월 상하이시 징안구 인민검찰원(上海市静安区人民检察院)의 공소 제기에 따라, 상하이시 징안구 인민법원(上海市静安区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죄로 화씨 등에게 징역 4년 9개월에서 1년까지를 선고하고, 개인 피고인에게는 3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관련 법인들에 대해서는 합계 7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수사기관은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8]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다수 저작물

8.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은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속된 기술 전문 심판보조 인력으로, 대학교수 · 전직 특

의 동일성 확인에 표본추출 방식을 도입하여 대규모 해외 저작물 침해의 입증 부담을 해소하였다. 관련 법인에 대한 직접 형사 제재를 부과하여 법인을 내세우는 우회적 침해 구조도 차단하였다. 이 사건은 해외 저작권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법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소결]** 두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 경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블록체인 증거 고정과 표본추출 감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증거 방법론의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 저작권 등록 및 법인 우회 구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다. 특히 해외 저작권자의 저작물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된다는 점은 중국 내 권리 행사를 준비 중인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 III. 2025년 집행 동향 분석: 다섯 가지 키워드

### 1. '검망행동(剑网行动)'과의 연계: 캠페인에서 상시 집행으로

10대 사건 중 다수가 국가판권국이 200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저작권 집중 단속 특별 캠페인 '검망행동(剑网行动)'의 성과물이다. 상하이 시청각저작물 사건은 '검망2025(剑网2025)' 특별 캠페인의 전형 사례로 명시되었으며, 극장 개봉 영화 단속 특별 캠페인,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 등 복수의 하위 특별 캠페인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집행 구조 자체의 전환이다. 10대 사건의 입건 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산되어 있으며, 입건에서 판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된 사건이 다수이다. 단속의 시계가 짧아진 것이 아니라 더 길어지고 집요해진 것이다. 중국 저작권 집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캠페인성 단속을 넘어, 장기 추적 · 수사 · 기소 · 판결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상시 집행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

허심사관 · 산업계 전문가 등 이공계 전문자격자 중에서 선임된다. 최고인민법원의 「기술조사관 참여 지식재산권 소송활동에 관한 규정」(2019년 4월 공포, 동년 5월 1일 시행)에 따라, 기술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기술적 사실의 조사 · 확인 및 의견 제시에 참여하나, 심판권 자체는 법관에게 귀속된다.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 · 강제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 인력이거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수사기관 소속 기술 인력인 것과 달리, 기술조사관은 법원 내 재판지원 인력으로서 수사나 강제처분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2. 행정 · 형사 연계 집행의 심화: '행형 연계(行刑衔接)'의 제도화

2025년 10대 사건의 처리 결과는 행정처벌 3건, 형사처벌 7건이다. 위법 거래액이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대형 사건들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귀결되었으며, 저작권 침해죄(侵犯著作权罪)와 침해복제품 판매죄(销售侵权复制品罪)가 병합 기소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집행의 흐름은 일관되다. '저작권 행정집행 부문의 단서 확보 · 이관 → 공안 입건 → 검찰 기소 → 법원 판결'의 순차적 이관 모델이 표준화되어 있다. 과거 행정처벌로 마무리되던 중대 침해 사건이 이제 형사 사법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형 연계(行刑衔接)' 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착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 강화와 함께, 민사 구제와 형사처벌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중국 저작권 집행 체계 전반이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플랫폼 책임의 구체화: 레드플래그 원칙(红旗原则)의 행정적 확장

상하이 시청각저작물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가판권국이 관리하는 조기경보 명단이라는 공적 제도를 레드플래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식이 행정집행 실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별 권리자의 침해 통지(notice and takedown)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국가 관리 명단을 통해 플랫폼 책임의 범위를 행정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한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법리와 비교하면 접근 방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은 개별 통지 수령 여부와 조치의 신속성을 중심 기준으로 삼되, 판례는 OSP가 침해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9] 이 점에서 한 · 중 양국 모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귀책 요건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중국은 국가 관리 명단이라는 추가적 공법 제도를 통해 플랫폼에 사실상 선제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법적 개입 강도는 한국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소리바다 사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OSP가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경우 방조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4. 전국 공조 수사의 일상화: 해적판 공급망 일망타진의 실현

창사 도서 사건(6개 지역 공안 협력), 전장 교재 사건(저작권보호연근센터 활용), 진화 영화 사건(검찰 입건 감독(立案监督)으로 템플릿 제공자 추궁), 둥관 음악 사건(5개 기관 협력) 등은 수직적 · 수평적 집행 협력의 심화를 보여준다. 지역적 · 혈연적 유대로 결속된 조직적 침해 네트워크를 단일 지역 공안이 단독으로 해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2025년 10대 사건에서 확인된 광역 공조 수사 체계는 이 한계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특히 저장성 영화 사건에서 검찰이 입건 감독을 통해 해적판 사이트 제작 템플릿 제공자의 책임을 추궁한 것은 중요한 선례이다. 직접적 침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침해 생태계 전체의 기반 인프라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집행 전략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5. 해외 저작권자 보호의 실질화: 내외국인 동등 보호 원칙의 구현

상하이 징안 만화 앱 사건과 양저우 소프트웨어 키 사건 모두 해외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피해 대상이었음에도, 법원은 내국 저작권자와 동일한 기준과 강도로 보호하였다. 대규모 해외 저작물 침해의 입증을 위해 표본추출 방식의 동일성 감정을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중국이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상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을 집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콘텐츠, 한국산 소프트웨어, 한국 기업의 문화창의 저작물 역시 이 시스템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자 스스로 중국 내에서 침해 신고와 증거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IV. 국내 기업 · 권리자에 대한 시사점

2025년 10대 사건이 드러낸 중국 저작권 집행의 변화는 국내 기업과 권리자에게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분야별 대응 포인트를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플랫폼 계약 및 모니터링 체계

중국 플랫폼과의 계약서에 침해 콘텐츠 상시 모니터링 의무, 침해 확인 후 24~48시간 이내 신속 삭제 의무, 조기경보 명단 등재 저작물에 대한 사전 필터링 의무,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판권국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명단(版权保护预警名单)에 자사 주요 저작물을 등재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단 등재는 플랫폼의 침해 인지 가능성(레드플래그)을 행정집행 실무상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 2. 소프트웨어 · 콘텐츠별 증거 수집 체계

웹툰 · 드라마 · 게임 ·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침해 증거 수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 기록, 소셜 플랫폼 메시지 캡처 등 디지털 증거가 형사처벌의 핵심 입증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거의 체계적 수집과 보전이 권리 행사의 전제 조건이 된다. 중국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블록체인 기반 창작 시점 증거 보존 시스템의 도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사 저작물의 중국 내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 등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 3. DRM · TPM 기술 보호 및 크랙 대응

DRM · TPM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우회도구 유통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랙 키 제작 · 배포자에 대한 독자적 형사 책임 추궁이 가능해진 만큼, 크랙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행형 연계 구조를 활용한 신고 전략

행정구제와 형사고소의 병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행정집행 부문에 대한 행정 신고가 공안 수사로 이어지는 행형 연계(行刑衔接)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실효적이다. 위법 거래액과 침해 규모가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정신고와 형사 고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Ⅴ. 나가며: '단속하는 중국'에서 '보호하는 중국'으로

2025년 10대 사건이 제시하는 수치들은 그 자체로 묵직하다. 최고 징역 7년, 1,730만 위안의 벌금, 16만여 편에 달하는 침해 저작물, 40만 권이 넘는 해적판 교재, 2만여 개의 해적판 음악 USB—이 숫자들은 중국 저작권 집행이 더 이상 형식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5년 10대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집행의 생태계가 바뀌었다. 행정 · 공안 · 검찰 · 법원 · 저작권보호연근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집행 생태계 안에서 침해 공급망 전체가 단속 대상이 된다. 둘째, 증거 방법론의 혁신이 집행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블록체인 증거 고정, 표본추출 동일성 감정, 기술조사관 제도, 디지털 거래 기록 활용—이 도구들은 과거 대규모 침해 사건에서 권리자가 겪었던 입증의 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다. 셋째, 해외 저작권자도 이 시스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중국 내 저작권 등록, 조기경보 명단 등재, 현지 법무 인프라 구축, 침해 발견 즉시의 신고와 증거 보전—이 일련의 선제적 대응이 전제될 때 비로소 이 시스템은 작동한다.

물론 한계도 분명하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일상적 소규모 침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분석한 10대 사건은 국가판권국이 선별 · 발표한 모범 사례이므로, 중국 저작권 집행 전반이 이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하는 데는 방법론적 신중함이 필요하다. 자국 콘텐츠 산업의 급성장이 국내 권리자 보호의 유인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 외국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 수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 검증도 필요하다.

그러나 2025년 10대 사건이 보여주는 궤적은 분명하다. 중국은 '단속하는 중국'을 넘어 '보호하는 중국'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다. K-콘텐츠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 전환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중국 저작권 집행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권리보호 전략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 이 글에서 인용한 사건 내용은 중국 국가판권국이 2026년 5월 22일 공식 발표한 「2025년도 전국 침해 · 해적판 단속 10대 사건(2025年度全国打击侵权盗版十大案件)」(https://www.ncac.gov.cn/xxfb/ywxx/202605/t20260527_991679.html)을 원문으로 한다.